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2012. 2.

KDI 경제정보센터

들어가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들을 펼쳤고 그를 통해 거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나, 지난 4년간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다란 어려움들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에서 보듯 이들 위기의 대부분들이 외부로부터 파생된 것이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해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주가폭락, 내수위축, 수출급감 등의 현상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자 대부분의 외신들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고, 외신들은 이러한 우리를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미국의 재정위기에 이어 남유럽 국가들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또다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연속 속에서 정부는 FTA 확대와 재정의 조기집행 등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여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을 바탕으로 그 정책들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취합·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객관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주요 외신이 한국경제에 대해 평가한 1,800여건의 보도기사를 분석·정리했습니다. 외부로부터 파생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과 그 성과를 다룬 본 자료가, 외부의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DI 원장 현 오 석

- 목 차 -

I. 지난 4년간의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대응	1
1) 국내외 경제 여건 : 위기의 연속	1
2) 위기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 : 비상경제정부 가동	1
3) 경제적 성과 종합 : 명암 교차	3
II. 지난 4년간의 경제적 성과	5
1. 급부상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5
1)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5
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5
3)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6
4)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7
5) 금융위기에서 국가신용등급 상승	7
6) 한국형 원전수출 개시	8
7) K-Pop, 한식 등 한류문화의 세계화	8
2. 위기를 넘어 지속성장 체제로 전환	10
1) 위기 속에서도 4년간 3%대 성장	10
2)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10
3)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7대 수출대국 달성)	11
4)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12
5)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13
6) 4년간 일자리 창출	14
7)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육박	15
3.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노력	16
1) 복지예산, 역대 최고인 92조원	16
2) 보금자리주택	16
3) 서민금융 확대	17
4)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확대	18
5) 보육시설 확충	19
6) '5세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 확대	19

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노인복지 강화	20
8) 사회적 기업 활성화	21
4.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22
1) 공정과세·성실납세	22
2) 학력차별 철폐 및 3대 고용차별(성·연령·비정규직) 시정	23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23
4) 공정거래질서 확립	24
5.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25
1)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25
2) 경인 아라뱃길 완공	26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7
4) 新성장산업 육성	28
5) 세계 최대(국내 최초) 조력발전소 건설	29
6) 태양광발전 확대	30
7)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31
8) 구로밸리의 첨단디지털 단지로 변모	32
9)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33
6.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35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35
2)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등 편리한 창업시대	35
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개설	36
4) 공공분야 SW 발주 시 중소기업 우대	36
5)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37
6)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38
7)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39
8) 규제개혁	40
9) 공기업 선진화	41
10) 新노사문화 창조	42
1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43
12) 산업단지 개발 기간의 획기적 단축	44
7. 지역균형 발전 추진	45
1)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	45

2) 세종시 이전	45
3) 국가철도망 구축	46
4) 새만금 종합개발 추진	46
5)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47
6)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48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8
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	49
III. 향후 정책과제	51
1) 단기 정책과제	51
2) 중장기 정책 과제	52
<참고자료> 외신이 본 한국경제 4년	54

I. 지난 4년간의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대응

1) 국내외 경제 여건 : 위기의 연속

2008년 2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중순에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7월 140달러 돌파)하고, 그해 가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 위기를 연속적으로 경험했다. 즉, 2008~2009년에 고유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에 그리스 및 미국의 재정위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남북한 긴장 고조, 2011년에 남유럽 국가들로의 재정위기 확산 등 말 그대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만 위기를 겪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어 기업들의 수출 진작 노력 등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겪어온 위기들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들에서 많이 발생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선진국들의 수입수요 위축 등으로 2008년 4분기 중에 마이너스 성장(전기비 -4.5%)을 기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환율 및 유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야기돼 서민경제가 위축되면서 정책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대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한 바 있다. 즉, 리만 브라더스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 불안으로 선진국의 투자 및 소비가 급랭했고, 이는 무역신용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곧바로 신흥시장국의 수출급감으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느 국가들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1년에 확산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각국의 금융 및 재정정책 수단들은 재원고갈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해당국들이 위기 국면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만일 추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위기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 : 비상경제정부 가동

현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수반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위기극복이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말에 나타난 주가폭락과 환율불안 그리고 수출급감 현상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였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1월에 '비상경제정부'를 출범시켰다. 그해 1월 8일에 제1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1년여 만에 39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에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 비상경제정부 운용시한을 연장했다.

이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들을 직접 챙김에 따라 주요 정책들이 조속히 결정·추진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9년 2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6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2008년과 2009년에 수정 및 슈퍼추경으로 총 38조원을 편성했다.

이같이 정부는 재정의 확대지출을 포함해 세제지원 강화, 재정의 조기 집행 그리고 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실제로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곧바로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5.25%→2.00%)해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압박 및 가계·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극심한 신용경색을 해소했다. 또한 한·미 통화스왑자금 공급 등을 통해 대규모 외화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그 결과 금융·외환시장은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2009년 2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해 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됐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여러 경제위기들에 대한 극복의 일환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경제영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ASEAN FTA 완료(2009년),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한·EU FTA 발효(2011년), 한·페루 FTA 발효(2011년), 한·미 FTA 비준(2011년) 등의 성과를 거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세계경제(GDP 기준)의 61%의 비중을 차지하는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1위 칠레 87%, 2위 멕시코 72%) 수준까지 확대됐다. 곧 중국과도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1년에는 일본 및 중국과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약 1,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확보하는 등 통화스왑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 확산시 불거질 수 있는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3) 경제적 성과 종합 : 명암 교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가 추진한 각종 비상대책으로 우리 경제는 2009년 1분기 이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2009년에 플러스 성장(0.3%)을 했으며, 2010년에는 6.2% 성장을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의 경기회복세였다. 2011년 4분기에 유럽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0.3%, 잠정치)을 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년 우리 경제는 3.6%(잠정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주요 외신들은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textbook recovery)로 높게 평가했다. 국제신용기관 무디스는 지난 2010년 4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A2→A1)하기도 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선진국 경기둔화 등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1년 2분기 이후 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위기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말 현재 3,113억4천만달러로, 2011년 말 3,064억달러보다도 49억4천만달러가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양한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2008년 2,012억달러, 2009년 2,700억달러, 2010년 2,916억달러 등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수출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노력으로 2010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2년 연속 4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5일 마침내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액 1조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후 50년 만의 기록으로 기존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는 1천억달러 후 23년, 5천억달러 후 6년 만에 1조달러를 달성한 반면, 기존 국가들은 1천억달러 이후 평균 26.4년, 5천억달러 이후 8.4년이 소요됐다. 무역 1조달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면서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시마다 위기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산업융합과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아나간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단기대책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

제의 미래 대표선수, 미래 먹을거리를 선발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정책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고유가 등 외부 여건 등으로 지난해에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었다. 올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부도 2012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물가안정'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따른 현상이다. 현재 정부가 많은 관련 대책들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현상으로 그 효과가 생각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소득원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내수 활성화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현 정부가 남은 임기에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II. 지난 4년간의 경제적 성과

1. 급부상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1)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우리나라는 非G8 아시아 국가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0년 11월 11일~12일 이틀간 개최된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신규의제를 제시해 향후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서울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해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 또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Basel III) 및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와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과제 등 새로운 이슈를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하고,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 막바지 협상을 앞당기는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초로 개도국의 빈곤 및 개발격차 해소를 G20의 주요 어젠다로 논의하는 등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신규의제를 제시하는 실질적 성과를 냄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한 세계 리더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난 2011년 7월 6일 강원도 평창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전 국민의 91%가 유치를 찬성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정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체제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 초기인 2009년과 IOC 실사가 열린 2011년 2월에 평창을 방문해 평가단을 접견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천명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 약속을 통해 개최지 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는 20조4,973억원에 달하며, 관광효과와 관련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림픽 기간 동안 20만명의 관광수요가 발생하고 3,920억원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로 인해 약 6,6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개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개최지의 브랜드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3)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지난 4년간 우리나라는 EU,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이어 한·미 FTA 추가협상을 타결하는 등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국·자원부국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인 EU와 FTA를 체결해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얻었으며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EU FTA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하고 관세철폐에 따라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3.61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中·日·EU 등에 앞서 단일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해 전 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Hub)로 발전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6.0% 증가하고 제조업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연 7.5억달러 확대되는 등 현재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 간 경제·정치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주변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우월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2012년 1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2월 중 한국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돌입했다.

4)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ODA 규모 확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1.7억 달러로 23개 DAC 회원국 중 18위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대비 25.7% 증가한 수치로, DAC 회원국 중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여전히 DAC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우리나라가 신규 DAC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빠른 ODA 증가세를 보였으며, 향후 정부의 ODA 확대 계획에 따라 ODA 규모 및 ODA/GNI 비율 순위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국제 개발원조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국제회의인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됐다. 160여개국 정부대표, 70여개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대표 등 2,500여명이 참석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생생한 사례로 공유함으로써 한국형 ODA 구축의 계기가 됐으며,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의 양허성 차관(EDCF)과 KSP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

5) 금융위기에서 국가신용등급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Fitch는 2011년 11월 7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S&P는 2011년 12월 14일 한국의 신용등급(A) 및 전망(Stable)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경제 체질이 강화됐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6) 한국형 원전수출 개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 발전사업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한국형 원전수출에 처음 성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과의 원전수주 경쟁에서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를 펼쳐 국내 컨소시엄이 UAE 원전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UAE 원전건설 수주로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건설에서 벗어나 중동 산유국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산전국(産電國)의 꿈을 이루게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이 됨으로써 선진 기술력 및 원전산업 강국으로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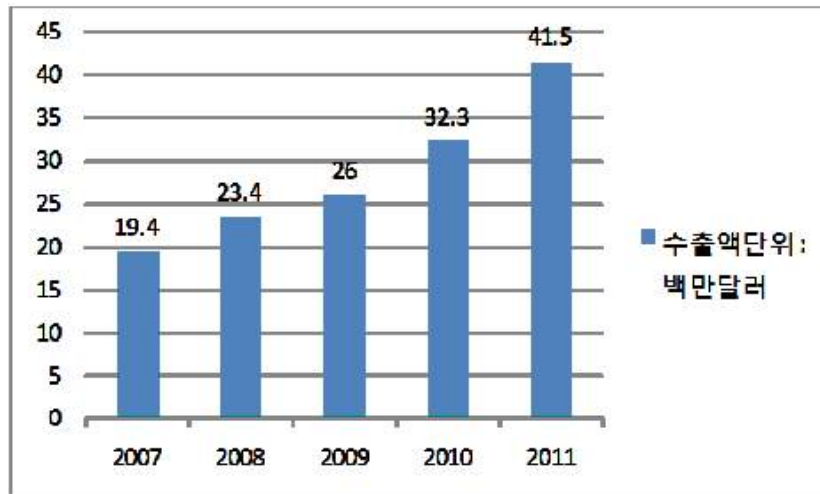
7) K-Pop, 한식 등 한류문화의 세계화

<문화콘텐츠 수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성장>

최근 5년간(2007~2011년) 문화콘텐츠 수출은 연평균 25.2% 증가하며 2배 이상의 성장을 일궈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실업자 증가 속에서도 콘텐츠산업의 고용은 2008년 49만명에서 2011년 59만명으로 증가하며, 이 부문에서 10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처럼 문화콘텐츠 분야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문화기술(CT) R&D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다 한류가 순풍을 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K-Pop과 창작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1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비 29% 증가한 약 41.6억달러로 예상된다. 콘텐츠산업별 전년비 수출 증가율은 음악(113%), 만화(88%), 영화(65%), 캐릭터(36%) 산업 순서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일본(26%), 중국(25%), 동남아(22%), 북미(13%) 순서로 높았다.

< 콘텐츠산업 수출액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식의 세계화 확산>

한식의 세계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의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설립했으며,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프랜차이즈 해외 1호점 개설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등 한식 문화 확산과 경쟁력 있는 한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지원정책과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은 7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의 수출액은 일본시장에 편중되었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전년비 6.3% 증가해 1억달러를 돌파했고 막걸리 수출액은 전년비 무려 176.3% 증가해 5천만달러를 돌파했다.

이외에도 라면, 소주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비 12%, 7.1%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개설지원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너시스는 ‘BBQ’브랜드를 통해 해외 56개국에서 350여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채선당, 원할머니보쌈, 카페베네 등도 중국, 미국 등에 해외매장을 개설한 바 있다.

2. 위기를 넘어 지속성장 체제로 전환

1) 위기 속에서도 4년간 3%대 성장

현 정부 출범 후 4년 평균 연간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였던 점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08	'09	'10	'11
실질 GDP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2.3	0.3	6.2	3.6

특히 2008년 4분기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전기비 -4.5%)을 했던 우리 경제는 2009년 1분기 이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2009년에 플러스 성장(0.3%)을 했으며, 2010년에는 6.2% 성장을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의 경기회복세였다.

* 성장률('09→'10년, %): (韓)0.3→6.2, (美)△3.5→3.0, (獨)△5.1→3.6, (日)△6.3→4.0

이러한 우리나라를 IMF 등 국제기구와 주요 외신들은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textbook recovery)로 높게 평가했다. 국제신용기관 무디스는 지난 2010년 4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A2→A1)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 선진국 경기둔화 등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1년 2분기 이후 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2010년 연간	1/4	2/4	3/4	4/4	2011년 연간	1/4	2/4	3/4	4/4
전기비		2.1	1.4	0.6	0.5		1.3	0.9	0.8	0.4
전년동기비	6.2	8.5	7.5	4.4	4.7	3.6	4.2	3.4	3.5	3.4

2)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201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역대 최고수준인 2만3,000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말 기준 1인당 GNI는 2만759달러였다. 전년보다 10.0% 가량 증가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사상 처음 2만달러를 돌파했다(2만1,695달러).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리만 브라더스 등의 파산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 선진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둔화되면서 우리의 국민소득도 2만달러 밑(1만9,296달러)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1만7,193달러까지 추락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GNI는 2010년 2만달러에 다시 진입했으며,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추정)함으로써 2년 연속 2만달러대를 유지했다.

1인당 국민소득 추이(달러)

연 도	1인당 GNI	1인당 GDP
2005	17,531	17,551
2006	19,722	19,707
2007	21,695	21,653
2008	19,296	19,162
2009	17,193	17,110
2010	20,759	20,756
2011	22,500~23,000*	23,749



주 : *는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IMF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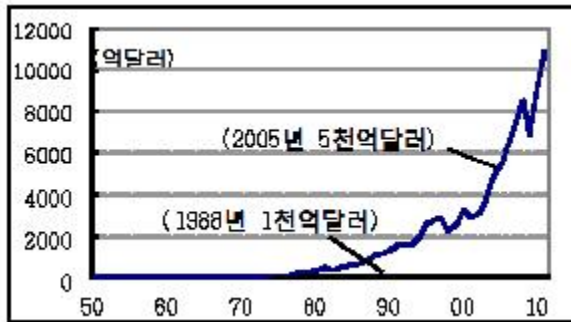
3)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7대 수출대국 달성)

지난 4년간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ASEAN FTA 완료(2009년),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한·EU FTA 발효(2011년), 한·페루 FTA 발효(2011년), 한·미 FTA 비준(2011년) 등을 통해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세계경제(GDP 기준)의 61%,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1위 칠레 87%, 2위 멕시코 72%)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2년 연속 4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5일 마침내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액 1조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후 50년 만의 기록으로 기존 1조달러 달성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

다. 우리는 1천억달러 후 23년, 5천억달러 후 6년 만에 1조달러를 달성한 반면, 기존 국가들은 1천억달러 이후 평균 26.4년, 5천억달러 이후 8.4년이 소요됐다. 무역 1조달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무역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면서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위기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고 하겠다.

연도별 무역규모 추이



무역 1조달러 달성국가와 시기

국가명	달성시기
· 미국	1992년
· 독일	1998년
· 중국, 일본	2004년
· 프랑스	2006년
·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2007년
· 한국	2011년

4)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현 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서민 물가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단속 등을 통한 가격안정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08년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시행했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은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에는 유가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2009~2010년에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됐다.

	'08	'09	'10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4.7	2.8	3.0	4.0

그러나 2010년 9월 이후 이상기후,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상반기부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했다.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상황을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급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선 공공요금 안정과 농산물 수급안정, 할당관세 인하, 불공정거래 단속 등 미시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구조적 요인에 대해선 유통구조 개

선, 시장경쟁 촉진 등 구조적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에만 총 43번의 장·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166건의 안건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등 공급 충격, 하방 경직적 가격구조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2년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5)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온 리만 브라더스 사태(2008년 9월) 이후 곧바로 6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5.25%→2.00%)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압박 및 가계·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극심한 신용경색을 해소했다. 또한 한·미 통화스왑자금 공급 등을 통해 대규모 외화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그 결과 금융·외환시장은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2009년 2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해 주요 금융시장지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됐다.

아울러 은행 부문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1차: 2010년 1월, 2차: 2010년 7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도입(2010년 10월) 및 강화(2011년 7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2011년 8월 시행),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제한(2011년 7월), 여전사 외화차입 축소(2011년 7월) 등 불요불급한 외화차입 증가 억제 조치 등 2008년 위기 이후 대외·은행 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그간의 조치로 대외 부문과 은행 부문의 경우 2008년 위기 직전에 비해 건전성과 대응능력이 한층 제고됐다. 대외 부문의 경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7년 말 48%, 2008년 9월 말 52%, 2011년 3월 말 38%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은행 부문 외채도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은행 부문 예대율의 경우 규제수준인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BIS비율 등도 대폭 상승했다.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도 지도기준인 8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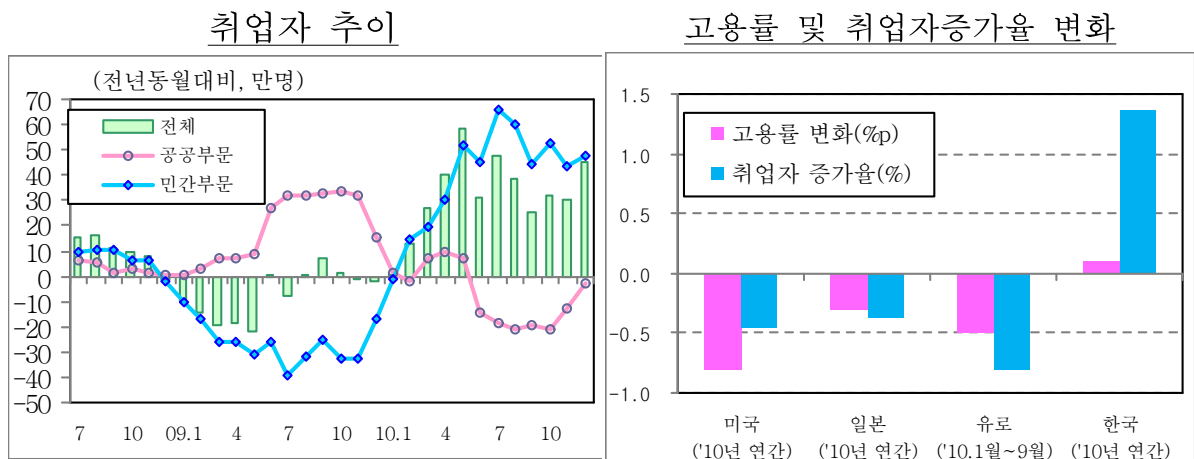
그리고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장기(만기 3년 이상)인 국고채 보유 비중이 확대(2008년 8.4%→2011년 8월 17.3%)되고, 통안채(만기 2년 이하) 보유 비중은 축소(2008년 12.7%→2011년 8월 13.2%)하는 등 상대적으로 중장기 목적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일반 투자자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 중앙은행·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됐다.

아울러 2011년에는 일본 및 중국과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약 1,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확보하는 등 통화스왑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 확산 시 불거질 수 있는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렇게 대외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온 결과 美·日 등 주요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기조 속에서도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2011년 11월 7일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외환보유액은 2012년 1월 말 현재 3,113억4천만달러로, 2011년 말 3,064억달러보다도 49억4천만달러가 증가했다. 2008년 말 경제위기 당시에는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2008년 2,012억달러, 2009년 2,700억달러, 2010년 2,916억달러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6) 4년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고용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요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로 취업자 추이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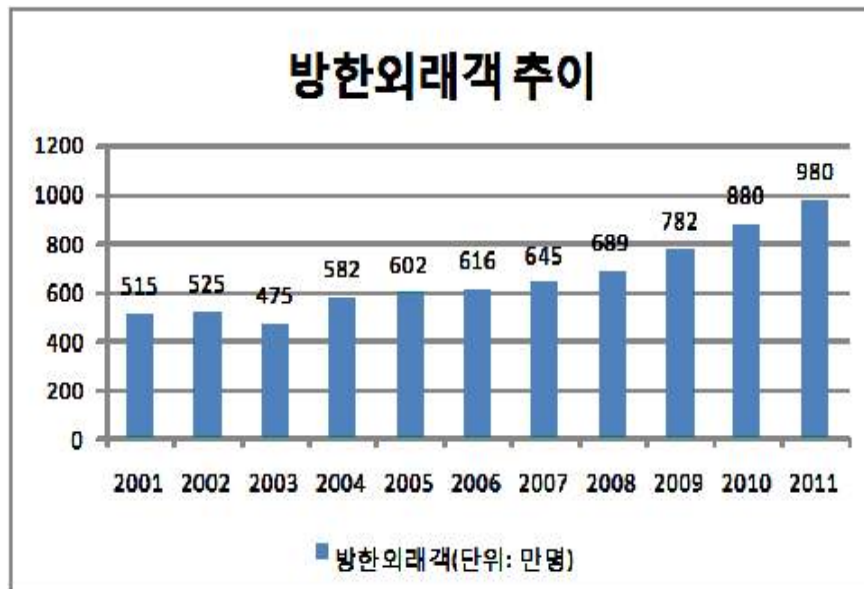
‘국가고용전략회의’ 설치 등 ‘일자리 정부’ 체제를 구축하고 고용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에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 수가 2009년 80만개, 2010년 58만개, 2011년 56만개로 늘어났다.

고용친화적 제도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업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2012년 예산을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

(2011년 9.5조원→2012년 10.5조원)했으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7)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육박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에 근접했다. 2009년 780만명, 2010년 880만명, 2011년 980만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씩 늘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고조된 남북 간 긴장상황은 외국인들의 방한심리를 위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유관기관 및 업계가 유연한 위기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관광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확대로 중국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은 2008년 117만명에서 2009년 134만명, 2010년 188만명으로 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으로 부상했는데, 지난해 세계 11위, 아시아 3위를 기록했다. G20정상회의(2010년), UNWTO총회(2011년)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했고, 중국 바오젠그룹 1만5천명 인센티브 관광(2011년) 등 3년간 103건을 유치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세계·금융지원 등 관광산업의 전략적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관광산업 육성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노력

1) 복지예산, 역대 최고인 92조원

2012년도 복지 전체 예산은 전년(86조4천억원)도 대비 6.4% 증가한 92조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정부 총지출의 28.2%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8.9%로 총지출 증가율(6.9%)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역시 2011년 7.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현 정부는 매년 복지지출을 꾸준히 증가시켜옴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복지지출 증가추세 (조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증가율
복지지출	61.4	70.1	82.4	81.2	86.4	8.9%
총지출	237.0	262.8	301.8	292.8	309.1	6.9%
복지지출 비중	25.9	26.7	27.3	27.7	28.0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6.3	6.6	7.0	7.0	7.0	

*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포함

복지재정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실효성에 집중하였다. 생애단계별(① 보육, ② 아동안전, ③ 교육·문화, ④ 주거·의료), 취약계층별(⑤ 장애인, ⑥ 노인, ⑦ 저소득층, ⑧ 다문화가족)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타겟팅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보육·특성화고교·다문화가족 등 3대 부문에 대해서 집중 지원(2010.9.16, 국민경제대책회의)함으로써 서민체감도를 제고시켰다.

2)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차별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 주도하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총 공급 물량은 150만호로 수도권에는 100만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8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기간을 2009~2012년으로 단축하는 조기건설안을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임대주택과 소형 주택의 비중 확대, 주거단지의 소규모화 등 공급물량 및 공급방식이 변화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09년 보금자리주택 14만6천호를 공급하여 계획물량 14만호를 초과 달성하였고, 2010년에도 보금자리주택 18만호를 공급하여 3차 지구까지 총 23만6천호가 공급되었다. 2011년엔 11만 가구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까지 전국 60만 가구, 수도권 3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서민금융 확대

정부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자를 축소하고자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다. 2008년 신용회복기금을 설립,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 보장 및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을 통해 서민과의 나눔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3대 서민금융의 개요 및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3대 서민금융 개요 및 실적 >

구 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목표	· 10년간 2조2천억원	· 5년간 10조원	·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 10%
대상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이자율	· 연 2~4.5%	· 연 11~14%	· 연 11~14%
성과	· 4,614억원 (56,335건) (2008.7~2011.11.30)	· 18,374억원 (204,946건) (2010.7.26~2011.11.30)	· 11,913억원 (148,759건) (2010.11.8~2011.10.31)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소금융 대출의 안정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미소금융사업의 토대를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찾아가는 미소금융'과 1인 출장소 설치 등을 통해 미소금융 대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햇살론의 대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 공급을 늘리는(2011년 1조2천억원 → 2012년 1조5천억원) 등 서민우대금융을 내실화할 계획이며, 주로 저신용층에만 공급되던 미소금융 공통상품을 저소득층까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확대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장학금 예산을 확충하고 학자금대출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 2010년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소득에 연계하여 학자금 상환)을 도입하여 학자금대출 제도를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으로 이원화했는데, 든든학자금은 대출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소득에 비례한 연간 의무상환액 결정으로 저소득층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재원조달 금리 인하 및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를 통해 학생의 학비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왔다.

* 대출금리 : (2008년 2학기) 7.8% → (2010년 1학기) 5.7% → (2011년 1학기) 4.9%
→ (2012년 1학기) 3.9%

< 학자금 대출실적 >

구 분	2010년(A)		2011년(B)		증감(B-A)	
	인원(명)	금액(억원)	인원(명)	금액(억원)	인원(명)	금액(억원)
든든	232,448	8,456	303,792	10,874	71,344	2,418
일반	528,943	19,205	429,744	15,979	△99,199	△3,226
합계	761,391	27,661	733,536	26,853	△27,855	△808

든든학자금 도입 후 2년이 지난 지금 든든학자금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든든학자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3.9% 수준이 되도록 674억원을 지원하고, 성적제한을 B⁰에서 C⁰로

낮추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학자금의 경우에도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예 76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하고, 823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총 2조원 규모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시대를 열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 보육시설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 시설 유형 등에 따라 일부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보육수요가 있으나 아동수가 적어 민간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공공·복지 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와 이동 놀이버스, 이동 어린이집 등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을 위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농어촌 근무교사의 특별근무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위해 2012년에 2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6) '5세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은 단순한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사회, 경제, 교육의 측면에서 인식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보육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투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걸맞게 현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현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지원 수혜 범위가 점점 넓어져 왔는데, 특히 2012년에 정부는 만0~2세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0세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연간 지원받음). 만3, 4세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전액 지원(만3세는 19만7천원, 만4세는 17만7천원 연간 지원받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 계층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만5세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5세 누리과정은 만5세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제공을 위해 기존의 소득하위 70% 계층에게 국한되었던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연간 20만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만5세 보육·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3월 시행을 위해 2011년 12월에 5세 누리과정 교사교육 강사요원 1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 이수자에 한해서 누리교육 과정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은 보육을 뛰어넘어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러한 양질의 공통 교육과정은 현재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 양극화,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노인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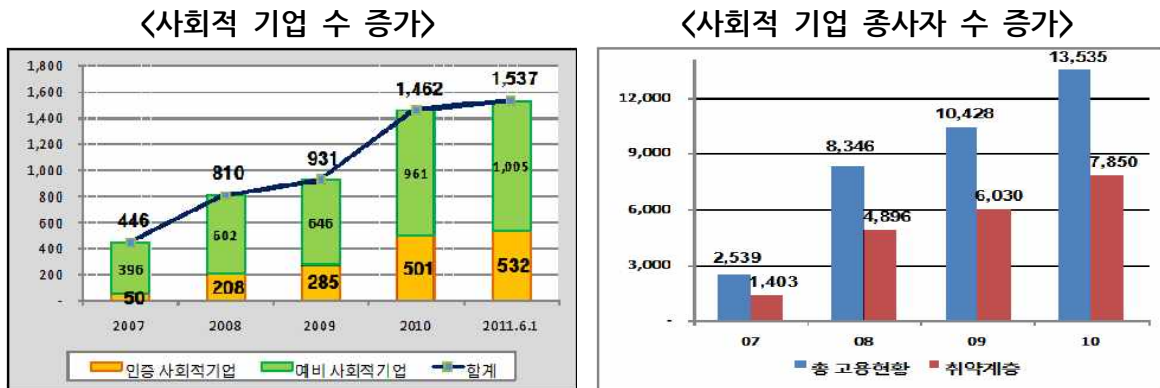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건강한 노후생활과 '제2의 삶'을 위한 노인 소득보장,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대표적 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노인복지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노인복지시설과 연계 협조하여 저소득노인에서 일반노인으로 치매무료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치매초기 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전체 노인의 21.5%(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경제, 건강 등 전반적인 생활 및 복지수준의 열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11년에는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 마련을 위해 독거노인과 민관기구를 연결하여 독거노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인턴십 제도'(Senior Internship Project)를 도입하고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도 설립했으며, 퇴직자 중심의 민간단체인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해 모기업 연계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복지시설 확충, 문화 바우처 지원 등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와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강화에도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8)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6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532개(예비적 사회기업은 100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0개(예비적 사회기업 396개)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증가는 현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연관이 있다. 특히 2010년 7월부터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 용자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정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 약 510억원(2011년 3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지원으로 사회 전반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기업의 자립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4.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1) 공정과세·성실납세

공정과세·성실납세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제도 정착은 공생발전과 공정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강화 및 특별관리, 변칙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방지 등 공정과세에 역점을 뒀으며, 성실 납세자 우대·지원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성실납세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2011년 2월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시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들에 대한 체납 처분과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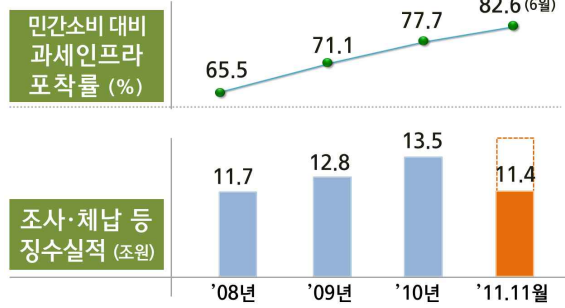
또한 정부는 2차 ‘공정사회추진회의’(2011.3.31)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확정하여 변칙적 상속·증여를 차단토록 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2011.5.2)하여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중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고(2010.12), 세무신고서식을 마련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2011년의 경우 10월까지 9,300억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2011년 1~7월 중에는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6개 국가 및 지역과 조세정보교환에 합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공정과세·성실납세를 위한 노력은 선진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국면에서 더욱 중요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정과세·성실납세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다.

<연도별 세수실적>

구분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전망
징수실적	157.5	154.3	166	180 내외
세입예산	157.3	153.9	160.2	175.1
초과액	0.2	0.4	5.8	5 내외

<과세 포착률과 징수실적>



2) 학력차별 철폐 및 3대 고용차별(성·연령·비정규직) 시정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학벌 지상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의 홍수 속에서 전문계 고교조차도 취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점에서 전문계 특성화고를 비롯한 고졸 청년의 일자리 확대는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고교 졸업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 재훈련 예산을 늘리고,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보조와 세금 우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장려해왔다. 그 결과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2009년 16.7%에서 2010년 19.2%, 2011년 25.9%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에는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학력차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는 노동시장내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을 위해 성·연령·비정규직 등 3대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남녀 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2010년 3,839명 → 2011년 4,695명),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상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2011년 1분기 4,381건, 2분기 3,785건 실시).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6개 운영) 및 '고용구조개선 컨설팅'(63개소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차별개선 노력을 지원하였다.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핵심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진정한 파트너관계를 구축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동반

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010.9).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2010.12)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2011.3),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12.1 시행) 등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작업과 함께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사를 병행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어우러져야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사례가 2010년 이후 대폭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연도별 협약체결 기업 수(재협약 포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월
대기업	69	51	73	101
중소협력사	22,494	24,798	22,168	28,108

이 외에도 11개 대형유통업체(3개 백화점, 5개 TV홈쇼핑, 3개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통시장 납품거래 공정화를 추진해 왔다.

4)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 시정 노력과 함께,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필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15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 약 1조2천억원을 부과했으며(2008년 2월~2011년 11월), 국내외 제약사의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적발·시정 조치해 왔다. 또한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하여 국내 소비자 및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지 노력을 펼쳐왔다(4년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20개국 46개 글로벌 사업자 제재).

소비자주권을 실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정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다단계·상조업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서민 피해 경감,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보급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5.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1)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2009년 하반기에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대강 본류를 정비하는 본 사업, 4대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13개 지류를 정비하는 직접연계사업,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며 예산 투입이 많은 본 사업은 지난해 말 완료됐고,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기대효과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어 13억톤의 물 확보와 함께 사업의 근본 취지인 홍수방지 효과는 이미 지난해 6월과 7월의 장마에서 검증됐다. 이러한 이치수(利治水) 효과와 함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공급과 수변생태의 복원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6개의 보를 건설하고 4억5천m³의 퇴적토를 준설해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확충했으며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노후 제방을 보강했다. 강변의 비닐하우스·농경지 철거 등 65km²를 포함해 225개 지구 140km²에 이르는 수변생태공원과 4대강 상·하류를 아우르는 1,592km의 자전거길도 조성했다. 또한 준설토를 활용한 주변 77km²의 농경지 리모델링을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96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를 실시해 가뭄·홍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하구둑의 배수문도 증설해 신속한 홍수 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사업 후엔 전 국민의 86%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3조9천억원을 투자해 1,281개의 환경기초시설 및 수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해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천 수질 기준과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기준도 강화했는데 분석에 따르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경우 2006년 76% 수준이던 2급수비율이 2012년이면 86%로 높아질 전망이다.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고용효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4대강 주변의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문화와 관광의 복합 문화육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주변 지역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대강과 주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한편, 강변 레저스포츠도 활성화하고 있다. 4대강 주변의 지자체에서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수변공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키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 숙박시설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수생태 복원과 수질개선, 친수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4대강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9월 24일 세종보 개방 행사 이후 1월 18일 현재까지 4대강 16개 보를 찾은 방문객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수계별 방문객으로는 한강 3개보와 북한강 수계에 31만명, 금강 3개보에 12만명, 영산강 2개보에 7만명, 낙동강 8개보에 53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 아라뱃길 완공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인공운하인 경인아라뱃길(18km)이 공사를 끝내고 지난해 10월 29일 개통됐다. 지난 2월 5일로 임시 개통 100일째를 맞은 아라뱃길은 올해 1월 31일까지 뱃길을 오간 관광객이 5만4천765명, 1일 평균 576명이 뱃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은 상습 침수구역인 굴포천의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 3월 착공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며 각종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운하 양편에는 조경, 도로 교통시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장의 거의 끝난 자동차도로 '아라파크웨이'와 자전거도로 '아라바람길'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코레일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는 운하 바로 옆에 나란히 이어진다.

올해 5월이면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수향(水鄕·물길이 아름다운 지역) 8경'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중 인천터미널 인근의 인공 섬 '아라빛섬'에는 야외무대 호수 야생화 산책로가 조성되며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시천교 남단 등 4곳에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소도 운영된다. 서울 중랑천 양재천 반포대교 등에서 아라뱃길까지 이어지는 30~80km의 자전거 코스는 이미 개장을 완료한 상태며 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16개 교량도 각각 특색 있는 첨단 조명과 조형물을 갖춰 명물로 꼽힌다.

단순히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물길이 아니라 홍수예방, 관광, 레저 등 복합 기능을 지닌 지역 명소로 자리잡는다는 목표다. 평상시에는 뱃길로, 홍수시에는 방수로로 이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륙 운송수단에 비해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 저탄소녹색물류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계획이다.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확정·공표했으며,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기능을 활용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 2월 8일 의결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개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배출허용량보다 초과 배출이 예상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 배출허용량을 충족하고, 배출허용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잉여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2만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 490곳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는다.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톤에 최대 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2009년 GDP 단위당 온실가스배출은 0.619KgCO₂/1,000원으로 2005년(0.659) 대비 6.1% 감소했고, 2005~2009년 성장률(13.45%)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6.54%)은 0.49로 경제성장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1.6%)로 2009년에는 2005년(5억7,030만톤) 대비 6.5% 증가한 6억760만톤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이상기후 및 에너지 다소비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등 에너지 수요 증가와 발전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이 2억2,200만toe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는 2008년 기준 0.30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0.10는 물론 OECD 평균인 0.18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석유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자원의 96%를 해외에 의존하고 관련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 4,452억달러의 29%인 1,21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경제산업 구조로는 자원고갈, 에너지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가의 녹색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근본적 의미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 녹색교통 등 녹색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新성장산업 육성

2008년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다. 2019년경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에 가세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력산업에서 탈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충해야만 했다. 더욱이 해외 주요국들 역시 신성장동력 분야를 발굴, 새로운 시장에 뛰어 들고 있어 신성장동력 육성의 속도전쟁에서 뒤질 경우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기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산업융합과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아나간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대표선수, 미래 먹을거리를 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009년 발표된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
고부가서비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자료: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비전 발표 이후 현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고 7월엔 ‘스마트 프로젝트’를 실시해 단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지원했으며, 8월엔 ‘장비산업 육성방안’, 2010년 1월에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성장동력 전반에 관한 육성 인프라 정책을 마련했다. 또 2010년에는 소프트웨어, 3D산업, U-health, 2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시밀러 등 개별 품목별 육성방안도 수립·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총 8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이 제정됐다. 그 결과 전기차 100%

국산화, 스마트십(Smart Ship) 개발, 감시로봇 시스템과 바이오시밀러 해외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났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 초기시장 창출에 힘쓴 것은 물론 2011년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2018년까지 70만 명의 신성장동력 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금융공급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사업 초기엔 정책자금을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성숙기에 접어들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해 민간투자 유발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2020년 대한민국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로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있다.

5) 세계 최대(국내 최초) 조력발전소 건설

1994년 방조제 공사 완료 이후 해수의 흐름이 차단돼 해양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시화호가 조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04년 12월 공사 착공 이후 7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시험운전이 완료된 발전기 6기를 대상으로 조기 전력생산에 돌입했다.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 10기 전 구간에서 발전이 이뤄졌다. 총 사업비 4,959억원이 투입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설용량 25만4천kW로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24만kW)보다 커 세계 최대 규모다. 연간발전량도 소양강댐의 1.56배인 5억5200만kWh로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또 연간 86만2천배럴의 유류수입 대체효과로 약 942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31만5천톤의 CO₂발생 저감 효과를 가져와 국가에너지 자급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시화호 수질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발전기와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 1일 수량이 시화호 전체 수량인 3억2천만톤의 절반에 육박하는 1억4700만톤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가동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및 환경 개선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이다. 안산시는 2013년까지 조력문화관을 건설하는 등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에 발맞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6) 태양광발전 확대

현 정부는 신성장동력이 될 미래 산업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안보 등 에너지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2010년 10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07년 1조2,500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0년 8조800억원으로 6.5배 성장했으며, 2007년 4천명에 불과했던 고용은 2010년 1만4천명으로 3.7배 증가했다. 2010년 수출액은 민간 투자액을 초과한 45억4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업계의 호응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장규모, 수출액 및 고용 등의 산업지표에서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과 풍력산업은 정부가 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는 분야다. 태양광은 '제2의 반도체', 풍력은 '제2의 조선산업'이 되도록 키워나가기 위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시행해왔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기업의 신규참여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치사슬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소재에서 시스템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가 마련됐고, 기가와트(GW) 규모의 생산도 가능해져 지속적인 성장 교두보를 확보했다. 세계적인 태양광 시장의 확대도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부채질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수출은 2007년 1억7천만달러에서 2010년 33억8천만달러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중심의 공격적 투자로 생산량과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국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기술력은 2010년 93 수준까지 상승했다. 태양전지(셀) 생산량은 2007년 36MW에서 2009년 901MW로 늘었으며, 태양광 분야 수출실적은 같은 기간 1억7300만달러에서 13억8백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편 태양광의 국내 보급량은 연평균 6.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은 물론 세계 10위의 누적 보급량을 기록했다.

<표> 연도별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용량 (kW)	563	2553	4990	22,322	45,347	275,665	166,838	126,645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정부는 태양광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00MW의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을 정했다. 첫 해인 2012년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일시적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220MW를 배정·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 도입할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의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월 600kWh 이상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리스제도, 가칭 '햇살가득홈'을 도입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유도한다. '햇살가득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주면, 태양광업체는 전기다소비 신청가구(월 600kW 이상 사용)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시공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햇살가득홈 시범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2013년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My car' 시대에 이어 'My Solar'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이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개발로 모듈가격 하락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원자력, 화력 등 기존 전원을 활용한 발전원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발전원가가 동일한 수준을 형성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향후 획기적인 보급증가와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7)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정부는 의료 분야를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내다보고, 국가 차원에서 신약과 첨단의료기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 단지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첨단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집적해 놓은 거점 공간으로, 2012년까지 대구와 충북의 각 100만㎡(30만평) 부지에 핵심 시설을 조성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게 된다.

향후 의료산업 분야의 시장전망과 국가 신성장동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경북단지에서는 합성신약과 IT 기반 첨단의료기기를, 충북 오송단지에서는 바이오신약과 BT 기반 첨단의료기기를 각각 특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설 및 장비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향후 국내 의료산업의 취약 부분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 첨단 의료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8) 구로밸리의 첨단디지털 단지로 변모

1960~70년대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구로공단(구로공단이 오늘날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 불리며 도심형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지식기반산업 집적 지구는 지식산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등의 집적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조성 당시인 1964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봉제, 섬유, 의류제조업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전기·전자 제조업, 1990년대 말부터는 IT 업종 중심으로 입주 업종이 재편된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의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위주로 진행 중인 서울디지털단지의 업종 고도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단지 내에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종(異種)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지식산업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컨설팅업을 신규 유치하여 단지 내 업종 전환, 상호교류, 기업 결합 등을 통해 지식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2단지 내 기업부설 연구소와 대학원 분원, 디자인전문 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산업(의류·패션·디자인)과 연계하여 IT 및 패션과 관련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2단지는 서울디지털단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단지 전체에서 도심화가 가장 진전된 지역이므로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문화·유

통 등의 생산지원의 기능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업단지가 낡은 생산공간으로만 인식되고 단순 생산 기능 외에 근로자의 배움이나 편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 2010년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51개 노후 산업단지를 스웨덴의 시스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 등과 같이 쾌적하고 세련된 첨단 산업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수준 높은 일터를 제공하고 젊은이가 모이는 선진국형 기업밸리로 재창조하겠다는 정책이다. QWL 밸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 근로자 평생 학습 및 학생의 현장교육이 가능한 산학융합지구, 문화가 숨 쉬고 보육 및 산업 안전이 보장되는 녹색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9)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오늘날 서비스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확산과 일자리 감소라는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내수 시장 활성화로 과도한 대외 의존을 개선하고 재고누적에 따른 부담이 없으며 수요 자체가 안정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완충 역할을 한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날로 늘면서(2010년 기준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계속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OECD 국가나 제조업(2008년 기준 미국의 44%, 일본의 62%, 제조업의 41%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 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오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산업'적인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총 5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① 서비스수지 개선 ② 규제합리화 ③ 인프라 확충 ④ 차별 개선 및 9개 유망서비스업 육성 ⑤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R&D, 의료관광, 관광숙박시설 확충·중국 관광객 유치,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관 합동의 협의체(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정안이 마련되면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 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6.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선정이란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펼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하고, 양측의 논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79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 1차(16개, 2011년 9월 27일), 2차(25개, 2011년 11월 4일), 3차(38개, 2011년 12월 13일)에 걸쳐 두부, 레미콘, 도시락, 녹차, 국수, 자동차 부동액 등을 대상으로 지정

2)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등 편리한 창업시대

중소기업청은 편리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2010년 2월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11년 5월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취업규칙 신고절차를 재택창업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법인설립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했다. 취업규칙 신고가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기간이 2단계 5일로 축소됐다. 2010년 한 해 동안 1,000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재택창업시스템은 2011년에는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지식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제조업 등 372개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없이 1인 혼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프로젝트 담보부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수는 2009년 20만3천개에서 2010년 23만5천개로 15.7% 증가했으며 오는 2015년경엔 3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2011년 11월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창업기업(micro-startups) 지원에 사용될 1,800억원 규모의 재원 조성 내역과 집행 계획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기업만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고유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② 그동안 '교육' 위주로 이뤄졌던 앱 분야 지원을 '창업' 중심으로 전환 ③ 1인 창조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수익 창출 능력을 강화시켜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달라진 창업·경영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개설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정책적인 진입규제 속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독과점시장이다. 독과점적 TV홈쇼핑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결국 사회후생의 왜곡을 초래한다. 또한 TV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로 인식되고 있으나 거래조건은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인 TV홈쇼핑사와 중소기업 중심인 상품공급사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공정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TV홈쇼핑 개설 정책을 도입했다. TV홈쇼핑의 유통적 순기능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확보한 것이다.

'홈&쇼핑'(Home & Shopping)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제품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이다. 2011년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채널로 선정됐고 2012년 1월 7일 정식으로 개국했다. 홈&쇼핑은 전체 방송의 80%를 중소기업 제품에 배정하고, 대기업 제품에 비해 5% 가량 싼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꾸려 중소기업의 상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중간 유통업체 없이 홈쇼핑이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직매입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개설을 통해 유통망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됐다.

4) 공공분야 SW 발주 시 중소기업 우대

SW(소프트웨어)산업은 시장규모가 크고, 고용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그러나 SI(시스템통합)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61%)에 의존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에 저가로 참여하는 등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SW강국 도약전략(2010년 2월), 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2011년 2월) 등을 통해 전문·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RFP¹⁾ 상세화 및 PMO²⁾ 제도를 도입했다. 둘째, 대기업의 참여하한제를 신설했다. 이는 공공분야 SW 시장의 일정 부분을 중소 SW기업에 할당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긴요하게 작용하고, 자회사를 통하여 편법으로 수주하는 대기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 대기업 참여 하한액 범위 >

(단위: 억원)

대기업 구분	참여 하한액	
	변경 전	변경 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	80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	40

셋째, 중견 SW전문기업 참여를 보장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2012년 시행령 개정 추진).

넷째, 전문 SW기업의 양성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자율의 전문 SW기업 인정제 및 분야별 레퍼런스를 구축했다. 이는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왜곡된 SW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술력 있는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5)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2009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68만개 업체(전체 사업체수의 87.5%)에 522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1,283곳에 18만개 점포가 있으며, 32만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기준 전통시장 매출액은 21조3천억원으로 이는 대형마트 매출액 33조7천억원의 63.2% 수준이며, 2000~2009년 전체 사업체의 고용창출분 321만개의 37%인 119만개가 소상공인에서 창출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기여도는 높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현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08~2012년 서민금융 예산을 34조2천억원(2003~2007년 12.2조원 대비 2.8배 증가), 경쟁력 제고 예산을 1조3,347억원(2003~2007년 7,837억원 대비 1.7배 증가)까지 확대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

1) RFP(Request for Proposal): 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기술요건, 요구사항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

2)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으로 기획·구축·운영 등 관리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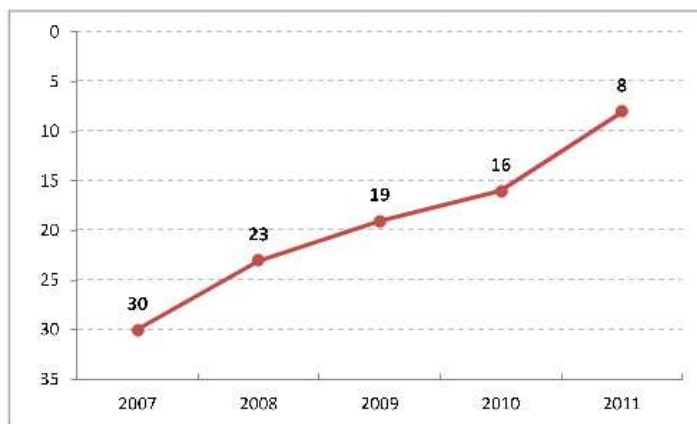
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고 전통시장 인근 1k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골목가게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바꿨고 그 결과 나들가게 개점 전 81만4천원이었던 1일 매출액이 100만3천원으로 23% 증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했으며 온누리상품권 판매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를 2011년 2,200억원에서 2012년 2,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가맹률 80%(1,023곳)였던 가맹시장을 100%(1,283곳)로 늘리는 한편 우체국, 신한 등 9개였던 판매은행에 농협, 우리은행, 제주은행 3개를 추가해 12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출은 14.9%, 신규 고객은 1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6)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011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평가순위는 전체 183개 국가 중에서 8위를 기록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6위, G20 회원국 중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기업환경 평가순위는 200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2010년의 16위에 비해 8단계 상승해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한국의 기업환경 평가순위 추이 >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2008~2009년), 건설·물류·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상·하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2010년), 국제 표준을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2011년) 등 총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걸림돌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환경 평가는 총 1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창업 등 6개 부문의 순위가 향상하고, 투자자 보호 등 2개 부문의 순위가 하락했다. 퇴출 부문은 전년과 유

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의 순위 상승은 창업(60→24위), 세금납부(49→38위) 부문의 제도 개선에 주로 기인했다. 재산권 등록(74→71위), 투자자 보호(74→79위), 건축 관련 인허가(22→26위)의 경우는 타국의 순위 변동 등에 따라 소폭 변동했다.

< 부문별 순위 변동 추이 >

평가 항목	'07	'08	'09	'10	'11
① 창업 (Starting a Business)	107	126	53	60	24
②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22	23	23	22	26
③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	-	-	-	11
④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62	67	71	74	71
⑤ 자금조달 (Getting Credit)	25	12	15	15	8
⑥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66	70	73	74	79
⑦ 세금납부 (Paying Taxes)	43	43	49	49	38
⑧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13	12	8	8	4
⑨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9	8	5	5	2
⑩ 퇴출 (Resolving Insolvency)	11	12	12	13	13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재원투입 없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규제개혁(Top-Down)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친화적·맞춤형 규제개혁(Bottom-Up)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

대주주가 다수인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견제기능 강화, 부적격 대주주 퇴출 등을 통해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부실 가능성을 줄였으며, 우량저축은행 여신 우대조치 폐지, 계열저축은행 연결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내실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었다. 또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철저한 부실책임 규명,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등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억제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2011년 영업정지된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등 8개 저축은행은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우량

금융자본 등에 매각(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매각)했다.

앞으로도 저축은행별 전담 감사역 및 정기·수시검사 등 저축은행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한 현장 감시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실우려저축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주주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 부실우려 PF대출 매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저축은행은 법에 따른 절차대로 신속·투명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8) 규제개혁

IMD·WEF·세계은행 등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국제기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정체된 주된 이유로 기업의 투자 감소와 생산성 증가의 둔화를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과거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규제 개선, 국토이용체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개혁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편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췄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그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다.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년간 실시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4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신규 산업단지 공급이 2004~2007년간 105개에서 2008~2011년 302개로 188% 증가했다. 둘째, 창업기간 단축(14일 → 5일), 법인설립 비용 감소(130만원 → 6만원) 등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셋째,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1,188종 → 3,013종),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209종 → 8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확대(71종 → 120종) 등 민원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넷째, 선취업 후취학 제도 정착,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제도 도입 등 고졸 채용 문화를 확산했다. 다섯째, 직진우선 신호 개편, 회전교차로 설치(190개소) 등 교통체계를 개편해 통행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규제 개혁 노력의 성과는 대내외의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총리실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2008년 61.9점에서 2011년 67.2점으로, 대한

상의가 실시한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도 2009년 26.8%에서 2011년 46.4%로 높아졌다. IMD·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의 평가순위도 높아졌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22위로 2008년 31위보다 9계단 상승했으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8위로 2008년 23위보다 무려 14계단이나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열린 고용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동산·금융·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정비, 교통체계 선진화 등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관광·물류·표준 및 인증제도 선진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9) 공기업 선진화

정부는 2008년부터 노사관계 선진화,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과거 15년간 끌어오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해외에 원전 수출, 노사합의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기존 직원의 보수 삭감 등 성과를 거뒀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공기업 선진화 전후의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보면 공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8~2010년 사이 31.6%로 대형 민간기업 2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되고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연도별 공기업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 추이>

(2000년 가격기준 단위: 억원/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31	2.40	2.35	1.89	2.75	3.23

이러한 성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인지도가 2009년 11월 70.5%에서 2011년 1월에는 92%로 20% 이상 높아졌다. 선진화 정책의 필요성도 2011년 83.5%로 2009년 80.3%보다 3% 정도 높아지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 그동안의 외형적 구조조정이 내부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무형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미래지향적 성과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0) 新노사문화 창조

정부는 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을 발표하는 등 출범 초기부터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이후에도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타임오프제 도입, 복수노조 시행, 노사분규 감소라는 3가지 성과를 거뒀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그간 우리나라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 19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했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해왔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 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산업현장의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비된 것으로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경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증대돼 우리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2010년 1월 1일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 간 과도한 세력 다툼 및 분열과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오랜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 해결되는 한편,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고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가 원칙을 지키면서 균형과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았던 노동현안이 해소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 제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노동조합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轉機)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노사분규 감소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노사분규는 108건, 121건, 86건, 22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근로손실일수 역시 80만9천일에서 62만7천일, 51만1천일, 18만3천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 10년 동안의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1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라 함)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중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7년 재벌기업이 쉽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쉽게 인수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엔 적대적 M&A가 허용되자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되기도 했으나 2001년 4월 다시 부활됐다.

출총제를 부활시키고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순환출자의 폐해도 여전하다고 본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그 제도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총제의 기본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계열회사의 동반부실화를 막고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 간 동반부실 문제는 채무지급보증 해소와 신규 보증금지가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제반 회사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계열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이유가 구조조정, 신규사업 진출,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때문일 수 있다. 출총제는 많은 예외조항을 뒤 많은 제도적 허점이 있었음에도 비관련 다각화 출자가 적용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어발식 다각화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세계적 기업들은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성장한 사례가 많다.

또한 2007년 이래 계속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출총제를 폐지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런 여러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현 정부는 2009년 3월 출총제를 폐지했다.

12) 산업단지 개발 기간의 획기적 단축

정부는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 2~4년 정도 소요되던 사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기업에게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경상남도는 민간투자자가 신청한 고성 상리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거창일반산업단지과 고성 대독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인·허가를 불과 4개월 만에 처리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상공회의소와 현대엠코가 공동설립한 강화일반산단이 2011년 9월에 제출한 강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불과 5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 2011년 현재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산업단지 내 신규고용은 24만2천명 증가했는데, 이는 직전 3년간 16만2천명이 고용됐던 것에 비해 약 50%가 증가한 수치다.

7. 지역균형 발전 추진

1)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14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이전지역에 16.8조원을 투자하고, 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2년 내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모든 이전기관의 청사를 착공하며, 지자체별로 아파트와 학교 등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청사 건축에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한다.

2011년 말까지 이미 63개 기관이 사실상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이전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전기관 청사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물'로 건축하도록 하고,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젊은 세대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 2040세대와의 대화'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세종시 이전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품격 높은 도시를 기치로 조성되고 있다. 세종시는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 1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둘째,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셋째,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넷째,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다섯째,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가 그것이다.

또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첫째,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둘째,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셋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넷째,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다섯째,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여섯째, 주민지원대책 보강 일곱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발전 방안은 원안에 비해 평균 10배의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돼 세종시가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3) 국가철도망 구축

2010년 4월, 정부는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첫째,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및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둘째,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셋째,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11~2020년까지 총 8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년 철도의 미래상>

구분		현재	장래(2020)	증가
수송분담률 (%)	여객	15.9	27.3	11.4
	화물	8	18.5	10.5
철도연장 (km)	합계	3,557.3	4,934.1	1,376.8
	고속철도	368.5	701.3	332.8
	일반철도 (고속화철도)	3,082.5	3,789.7 (1,661.1)	707.2
	광역철도	106.3	443.1	336.8
복선화율(%)		49.6	79.1	29.5
전철화율(%)		60.4	85.0	24.6

4) 새만금 종합개발 추진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새만금 사업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계획 발표와 함께 산업·관광 등을 포괄하는 다기능 융복합기지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어 2010년 1월, 산업·관광·국제업무 등이 복합된 명품도시 건설,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확보 및 조달사업, 방수제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를 5대 선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2011년 3월,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본격화하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확정하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의 미래상을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설정한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프리 도시 조성,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명품 수변도시 구현,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물의 도시인 새만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수목적에 부합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기존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메가 프로젝트로서 대한민국의 50~100년을 내다보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지역 특화사업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재정지원사업과 지역특구 지정, 지리적 표시, 브랜드화 등 관련 정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2009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미 지정된 특구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과 특구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역 스스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종전의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 지역개발과 관련된 210개 단위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예산(약 3조6,924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창·정읍·순창 등의 북분자광역클러스터, 한약재를 생산하는 시·군 간 한방약초 산업육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DMZ생태문화관광개발, 봉화·영양·청송·영월의 사과공동품질관리 및 가공시스템 구축 등 인접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좋은 사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 집중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개발하여 지역 특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6)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 신항 일대(면적 : 271만㎡)에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열리는 국제 박람회이다. 정부는 2006년 5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7년 11월 27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40개 회원국의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거쳐 경쟁국 모로코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2008년 2월 22일 여수 박람회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전남도지사·여수시장 등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출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준비를 지원하였다.

여수 박람회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며 '자원의 다양성(Diversity of Resources)'과 '지속 가능한 활동(Sustainable Activities)'의 개념을 추가했다. 행사장 면적은 174만㎡로 전시 면적 25만㎡에 종사자 숙박시설, 환승주차장, 공원, 녹지 등 지원시설을 포함한 것이다. 행사장은 바다, 땅, 숲, 바람의 공간 등 4가지 테마로 구성해 '해양과 육지, 인류와 자연,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2011년 11월 한국관과 국제관, 주제관 등 10여 개 전시관이 대부분 완공되었으며 시범 운영은 2012년 3~4월에 이뤄진다.

전 세계 106개 국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등 9개 국제기구가 박람회 참가를 확정하였다. 여수박람회는 약 1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조7천억원의 부가가치 및 약 7만9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모방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지만,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을 둔 창의적 국가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가 구성된 후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이 주축이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고 2009년 2월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 1월 정부는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핵심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었다. 2010년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011년 4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고, 2011년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가 대전·대덕지구로 확정되었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나뉘는데 거점지구는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신동·둔곡지구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설치, 지식기반산업 유치,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기초과학연구 및 미래성장동력 거점이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이다. 기능지구는 천안시, 청원군, 연기군으로 대학·연구소·산업단지·금융 등 특화된 인근지역을 지정하여 거점지구와 공동연구, 인력 교류, 사업화 등 능동적 연계활동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1월의 당초 계획은 7년간(2011~2017년) 투자규모가 3.5조원이었으나 확정된 계획은 이보다 1.7조원 증액된 5.2조원이다. 2012년 1월부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기존 개발계획 변경 등에 착수한다.

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도입 이후 다각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료·입지 등 핵심적인 규제의 잔존으로 '실질적인 경제자유'의 확보가 미흡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하여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현 정부 들어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더해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외국인투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을 맞아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 병목으로 작용한 핵심규제 완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R&D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현황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개, 명)

구분	사업 기간	면적	계획 인구	총 사업비	지구현황				
					지구수	미착수	개발중	완료	
1차 (‘03)	인천	‘03-’20	170km ²	63.9	90.0	27	7	14	6
	부산·진해	‘03-’20	83km ²	18.9	11.8	21	10	7	4
	광양·만권	‘03-’20	86km ²	7.0	12.4	20	10	8	2
2차 (‘08)	황해	‘08-’20	16km ²	7.0	4.7	3	3	-	-
	대구·경북	‘08-’20	33km ²	9.2	7.9	10	6	4	-
	새만금·군산	‘08-’20	50km ²	3.2	5.2	4	2	1	1
합계			437km ²	109.2	132	85	38	34	1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총계
전국(억\$)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136.7	960.7
FEZ(억\$) (비중, %)	1.2 (0.9)	5.8 (5.0)	1.3 (1.2)	3.1 (3.0)	2.3 (2.4)	7.9 (6.9)	9.5 (7.2)	10.4 (7.6)	41.4 (4.3)

* 구역별 총계(억달러) : 인천(19.3), 부산·진해(9.6), 광양(7.3), 황해(0.1), 대구·경북(0.4), 새만금·군산(4.8)

III. 향후 정책과제

현 정부 출범 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에 대응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시장안정 조치 등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의 지속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의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의 경기 둔화세를 대신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해오던 중국·인도 등 대형 신흥국들도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도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과제는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가운데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과 대·중소기업 등 공생발전의 확실한 토대를 놓은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단기 정책과제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선제적 대응>

지난해 4분기에 유럽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0.3%, 잠정)을 한 것에서 보듯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실물경제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경제활력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 거시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의 조기 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우리 경제 각 부문의 체질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위기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동성 지원을 지속적이며 적시에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수 활성화에 역량 집중>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비·투자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같은 강한 투자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 재정지원 효율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중소기업·자영업 등 내수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 가계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및 고용창출 강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가장 늦게 회복된다. 특히 서민들은 고물가에 취약하므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서민생활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물가는 원유가격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급등 등 많은 분야에서 늘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이 탄탄해져야 한다. 우선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청년실업을 포함해 많은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학적립금의 학내벤처기업 투자 등을 다양한 고용창출 방안 마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시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기업들의 고용유인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들의 부담이 큰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해 무주택 서민들도 주택구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2) 중장기 정책 과제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세계경제는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되는, 즉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리스와 같은 개별 국가의 재정위기에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근원적 위기대응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 위축되어도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넘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조기에 맞을 수 있다.

시장 확대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기업들의 세계무대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해외진출 지원 등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등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즉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공생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미래 잠재위험요인 대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제거하는 데에도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령 및 여성 인력의 노동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세대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식량·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외신이 본 한국경제 4년

본 자료는 現 정부 출범 후 4년여 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분석·정리한 것이다.

=====
분석 기간 : 2008. 2. 25 ~ 2012. 2. 20 (약 4년)
조사기사수 : 한국경제 관련 기사 약 1,800건
조사 대상 : Wall Street Journal 등 20개 외신
=====

외신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외채상환 부담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한국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내자 한국경제의 견실한 성장 배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경제주체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귀감으로 종종 거론되었다.

특히 現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FTA를 마무리한 데 대해 한국이 중국·일본 등 아시아 강대국들보다 한 발 앞서 무역개방의 기회를 포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기업들의 부실한 기업지배구조, 반외자 정서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외에도 외신들은 한국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한국 기업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 등에도 많은 외신이 주목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내수 기반 확대, 재벌개혁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조사대상 외신 : Wall Street Journal(미), New York Times(미), International Herald Tribune(미), Washington Post(미), LA Times(미), Financial Times(영), The Times(영), Le Monde(프), Le Figaro(프), Business Times(싱가포르), 닷케이(일), 아사히(일), Economist(영), Business Week(미), Time(미), Fobes(미), Bloomberg(미), AP(미), Reuters(영), AFP(프) 등 총 20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가 위상도 제고해. 남은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지난 4년간의 외신 공통 논조)

<글로벌 경제위기 성공적으로 극복>

-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외채상환 부담, 높은 수출비중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던 외신들은 이후 한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내자 한국경제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배경에도 큰 관심을 보여
- Financial Times(이하 FT)는 2010년 1분기 전년동기비 GDP 성장률이 전 분기의 6%에서 2002년 말 이후 최고치인 8%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돼 한국이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해냈다고 강조 (2010/4/28, Lex 칼럼, South Korea)
- Joseph Fuller 모니터그룹 공동 창립자는 Businessweek 기고를 통해 원화 가치 약세, 소비자들의 국산품 애용, 낮은 노동비용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기하강을 놀라울 만큼 잘 극복했다고 평가 (2010/2/26 인터넷판, Korea's next challenge: Global competitiveness)
 - 한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방어벽은 대기업들로, 이들의 회복력은 매우 강력해. 포춘誌 선정 500대 기업과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이 각각 14개, 4개 포함돼
 -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략을 재점검해야. 대외 지배구조 강화, 내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의사결정 분산, 인적자산 관리, 혁신 프로그램 마련, 세계화의 다음 국면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등이 필요
- Bloomberg는 비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닥터 둠(Dr. Doom)’이라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가 자신마저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고 보도 (2009/6/1, William Pesek 칼럼, Roubini)

finds economy even he can be bullish on)

- 루비니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이뤄낸 경제정책 변화를 근거로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를 황폐화시킨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험이 한국에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
- 내수 부진을 비롯한 자체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일본보다는 나은 상황. 그러나 한국은 내수에 더욱 집중하고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하 IHT)은 세계가 경제위기를 단기에 극복한 한국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금융개혁 등 고통스런 구조개혁을 통해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쓰라린 경험이 이번 위기 극복의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 (2011/1/7, Bouncing back: South Korea knows how)
 -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한국의 태도는 미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과, 구조개혁을 빠르고 단호하게 단행해 정책 당국자들의 국가경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국의 금융부문 개혁은 주목할 만해
- Bloomberg의 William Pesek 칼럼니스트는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의 위기대응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 (2010/11/8, William Pesek 칼럼, G-20 needs more than luck to avoid lost decade)
 - 1990년대 말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등 비효율적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금리정책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 버블을 막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 또한 William Pesek 칼럼니스트는 국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과거 한국의 IMF 구제금융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 (2010/5/10, William Pesek 칼럼, Greece's no-pain bailout fails confucian ethics)
 - 금모으기 운동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 정부의 과감하

고 신속한 구조조정 등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노동시장·기업지배구조 등의 문제도 많지만 한국은 역할모델로 삼기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좋은 국가

○ New York Times(이하 NYT)는 한국의 성공은 꾸준한 R&D 투자 증가, 세계 최장인 근로시간, 정부 주도의 장기 경제개발 계획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 (2010/6/9, Reinventing for success in South Korea)

- R&D 투자는 1970년 GDP의 0.5%에서 현재 3%로 증가해 한국이 기술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5시간으로 세계 최장이며,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이며 특히 과학·수학에서 우수

- 세계은행 前 이코노미스트 Danny Leipziger 美 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 교수, “경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에 걸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계속 실천해온 집중력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성공 요인.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과, 이 인프라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별개”

<대북 악재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

□ 외신들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대북 악재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이 그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FT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국 당국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당국자들이 나서지 않아도 견실한 경제성장 전망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 (2011/12/21, Lex 칼럼, South Korea: Dear investor)

○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것은 취임 이후 중요한 구조개혁을 여러 차례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평가 (2010/11/26, 사설, South Korea's prosperity defense)

-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 법인세율 인하, 개정 노조법 시행 등 이명박 대통령의 구조개혁들은 모두 한국의 투자 매력도 향상에 일조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더욱 높아진 한국의 국가 위상>

- 외신들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평가
- FT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거의 붕괴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 (2010/11/11, A bridge between old powers and emerging forces)
 - 중고소득 국가인 한국이 기존 경제세력과 신흥세력 간의 자연스런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어. 최근 G20이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으로 점점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한국이 환율에 국한된 논의를 무역불균형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 닛케이의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반면 일본은 뒤로 묻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2010/9/20)
- Time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 (2010/11/9, Aisa's latest miracle)
 -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와 중국의 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혁신함으로써 또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돼. 민주주의 급진전 등 한국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인들은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며 개방을 확대해
 -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약 3.5%로, 중국(1.5%)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이로 인해 삼성과 LG가 최첨단 LCD TV 시장을 장악하고 현대차가 세계 5위 자동차업체로 부상할 수 있었음. 또한 온라인게임에서

대중음악에 이르는 신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 한국은 부실한 교육 시스템, 과도한 기업 규제, 북한 리스크 등의 도전과제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10년 뒤엔 훨씬 더 나은 성장을 이룩할 것
- NYT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1997~9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한국의 역사적인 세계무대 데뷔 행사라는 한 외국인 교수의 표현을 인용 보도 (2010/11/10, G-20 event to showcase South Korea's arrival)
- 한편 외신들은 한류 열풍 확산 등에 따른 한국의 문화 수출이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
- FT는 지난 10년간 아시아를 뒤덮었던 한류 열풍이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문화 수출은 한때 존재감이 없던 한국을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탈바꿈시켰다고 강조 (2012/2/11, South Korea's K-pop takes off in the west)
- Le Monde는 K팝에 대한 유럽 팬들의 높은 관심을 집중 조명하며 K팝이 한국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 (2011/6/10, La vague pop coréenne gagne l'Europe)
- Economist는, 아시아 개도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발전 모델 전파에 적극 나섬으로써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 지금 당장은 주로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 역사 또한 독재 체제 중심의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012/2/18, This year's model)
- 한편 WSJ, FT, NYT, Le Monde 등 외신들은 평창의 인상적인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집중 분석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전망 (2011/7/7)
 - Bloomberg(2011/7/21), AFP(2011/7/8)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추산

<한국, 적극적인 FTA 영토 확장 등으로 現 위기 극복에도 좋은 입지>

- 2011년 하반기 유럽 부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여러 외신들이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 국내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제언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EU와의 FTA를 마무리하는 등 **무역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먼저 무역개방의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평가
- WSJ은, 이들 FTA를 통해 **한국경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방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2012/2/8, Asia's export day of reckoning)
- 특히 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일본이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내
 - 2010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 발효로 유럽시장에서 한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일본 업체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놓이게 돼. 이는 일본의 위기 상황 (닛케이 2011/7/1 사설)
 - 한·EU FTA는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 (아사히 2010/10/7)
- Bloomberg의 William Pesek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서기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그는 2012년 세계경제의 믿을 만한 성장 동력이 부재한 만큼 한국 스스로가 견실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 (2012/1/27, Can South Korea steer clear of global economic turmoil?)
- WSJ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한국경제가 성장·수출·내수가 둔화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충동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서 안 된다고 경고** (2012/1/27, Too early for panic in Seoul)
 - 총·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국은 발 빠르게 정책적 조치를 취할 유혹에

빠지기 쉽겠지만, 금리인하 이상의 경기부양책은 오판이 될 것. 한국경제는 올해 완만하게나마 성장할 전망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필요할 때 재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며, 절대 미리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 Forbes의 Bill Conerly 칼럼니스트는, 한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원화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대북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북한과의 충돌이나 유럽경제의 붕괴 같은 위험을 피해간다면 경기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 (2011/12/27, South Korea economic forecast, 2012-2013: A business perspective)

<재벌의 부실 경영, 반외자정서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 경제 양극화 심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재벌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외신들은 **정치권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 주목**. 또한 **재벌들의 부실한 기업지배구조, 반외자정서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
- Economist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탈세·횡령,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지원 등 **재벌 비리 및 부실경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 (2012/2/11, Minority report)
- Le Monde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신이 기업 부패와, 중소기업 영역을 무차별하게 침투하는 재벌들의 과욕이라는 고질병에 의해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벌의 욕심을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보도** (2011/8/10, En Corée du Sud, les chaebols gagnent en puissance et étouffent les PME)
- FT는 대기업·중소기업 및 수출·내수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 양극화 문제가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나 가계부채 대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성향이 정부가 내수에 초점을 둔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들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

(2011/5/30, South Korea: An economy divided)

- Economist는 재벌에 대한 사업 철회 압력, 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압력 등 한국 정치권의 재벌문제 접근법은 담합 등 재벌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 (2012/2/4, Let them eat cake)
- 한편 외신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마무리됐지만, 외국계 펀드의 대규모 차익실현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매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보도
 - WSJ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손상된 투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규제당국이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2012/1/31, 사설, Lone star shining)
 - 또한 WSJ은 론스타가 반외자정서 등의 영향으로 외환은행 매각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향후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가 꺾일 위험이 있다고 전망하며, 여성 인력 고용 확대 등 외국계 기업들의 순기능을 감안하면 한국은 론스타 사태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로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 (2012/2/2, Joseph Sterrberg 칼럼, Lone star and the woman of Korea)
 - WSJ은 2011년 8월 19일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중단하면서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시도가 무산된 것은 외환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반기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 (2011/8/22, Woori saga underscores worries about Korea)

<견실한 성장 지속하려면 근본적인 경제개혁 필요>

- 외신들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의 성장모델 변화, 경제 부문에서의 정부 개입 축소, 서비스산업 선진화, 재벌 개혁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주문
- WSJ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계층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편 경제 부문에서의 정부 개입을 줄이고 유교적

서열 문화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2010/11/8, The miracle is over. Now what?)

- 한국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 고숙련 노동인력을 흡수하는 한편 현재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이 성장에서 하는 역할을 서비스 부문이 보충하도록 하며, 혁신·창조가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계층의 노동인력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 FT는 인적자본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2008/8/7, A slower pace would help Seoul grow faster)

○ Economist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은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불평등 축소,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독려, 기업가정신 고취,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세계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2011/11/12, What do you do when reach the top?)

○ WSJ은 경기침체로 각국의 경제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 (2009/11/12, 사실, President Lee tackles labor)

- 이 대통령은 근로자 해고를 용이하게 만들어 노동 유연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노동개혁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